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4
----------	-------

발의연월일 : 2022. 1. 14.

발 의 자 : 서일준 · 김승수 · 김용판
박진 · 양금희 · 윤한홍
이 용 · 이주환 · 조명희
최형두 · 추경호 · 하영제
홍문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규정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을 “국회의장, 해당 시·도의회의장 또는 해당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u> 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 ----- ----- ---- <u>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u> ----- -----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u> ----- -----.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u>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u> ----- ----- ----- -----.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
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
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
원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
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
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
도시의 장이 -----

-----.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
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⑤ (생략)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

-----.

③ -----
----- 국회의장, 해당 시·도의회의장 또는 해당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장-----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장-----.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② -----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

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 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u>시의 장은</u> ----- ----- ----- ----- -----.
---	---